형사소송법

1. 다음 중 실제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 상소와 재심제도
- ㉢ 증거재판주의
- ㉣ 기소편의주의
- ㉤ 자유심증주의
- ㉥ 당사자처분권주의
- ㉦ 자백배제·보강법칙
- ㉧ 궤석재판제도

- ① 3개 ② 4개
- ③ 5개 ④ 6개

2. 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 ②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 ③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
- ④ 대통령의 재직기간(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

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거부 할 수 있다.

4. 즉결심판과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고른 것은?

-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보강법칙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약식절차는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부과만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즉결심판청구권자에 해양경찰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5.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 ㉤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를 제기한 때
- ㉥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①	3개	2개
②	3개	3개
③	2개	3개
④	2개	2개

6.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 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영장을 집행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7. 변호인의 대리권 중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고른 것은?

- ㉠ 구속취소청구권
- ㉡ 상소제기권
- ㉢ 보석청구권
- ㉣ 기피신청권
-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권
- ㉥ 상소취하권
- ㉦ 관할이전의 신청권
- ㉧ 증거보전 청구권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8.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 ㉠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 진술인 이상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의 채취, 사진촬영,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 ㉣ 피고인은 개별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할 수는 없다.
- ㉤ 변호사인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0개 ② 1개
- ③ 3개 ④ 4개

14. 다음은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 할 권리가 있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라 함은 수사기관 또는 사인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 간이공판절차의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의제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음주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 ① 0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15.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증거동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 ②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서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③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는 경우
- ④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 ①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②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
-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